

2026년
9호

KPF 미디어브리프

K P F Media Brief Webzine

개인정보·데이터 활용, 정보주체는 어디까지 용인할까?

: 상업적 활용에는 ‘엄격’, 공익 목적은 ‘반반’

양정애 |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 ✓ ▲연구·의료(46%), ▲공공안전·재난대응(45%) 목적엔 데이터 활용 “허용” 응답이 절반에 가까웠지만,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24%), ▲기업의 상품·서비스 개발(20%) 목적엔 20%대 초중반에 그쳐
- ✓ 이용자 데이터 수집·활용 ‘원칙’엔 압도적 공감: ▲기준 수립에 이용자 의견 반영해야 93%, ▲피해 발생 시 기업·기관이 책임져야 94%
- ✓ 교육 제공 경로 중 ‘학교 교육’ 필요성 94%로 가장 높았지만, 정작 학교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은 36%에 그쳐
- ✓ 개인정보 보호·관리 수준(10점 만점) ▲나 자신(7.1점) > ▲내 주변 사람들(6.3점) > ▲우리 사회 구성원들(5.5점)… 우리 사회 전반의 ‘제도·체계 수준’은 5.4점에 그쳐



디지털·AI 환경에서는 개인정보와 이용자 데이터가 기업과 기관의 다양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수집·활용되는 일이 일상적이다. 맞춤형 서비스나 신규 상품·서비스 개발은 물론, 의료·연구나 공공 안전처럼 사회적 편익과 직결되는 목적으로까지 데이터 활용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정보주체인 이용자가 이러한 수집·활용을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한 권리와 위험을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에서는 정보주체로서 미디어 이용자들이 기업·기관의 개인정보·데이터 수집·활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관련 권리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며 그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관리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아보고자 전국 만 16~58세 1,8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조사 결과 가운데 ① 기업·기관의 개인정보·데이터 수집·활용에 대한 인식, ② 개인정보 및 이용자 데이터 관련 교육 경험 및 필요성 인식, ③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관리 및 권리 준수 수준 인식을 중심으로 주요 결과를 살펴본다.

■ 기업·기관의 개인정보·데이터 수집·활용에 대한 인식

- 이용자 데이터 수집·활용 ‘원칙’엔 압도적 공감: ▲기준 수립에 이용자 의견 반영해야 93%, ▲피해 발생 시 책임져야 94%
- ▲연구·의료(46%), ▲공공안전·재난대응(45%) 목적엔 데이터 활용 “허용” 응답이 절반에 가까웠지만,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24%), ▲기업의 상품·서비스 개발(20%) 목적엔 20%대 초중반에 그쳐
- 관련 사회적 의제에 참여할 의향: ▲정보를 알리거나 공유하기(56%), ▲청원·서명운동 참여(54%)에 응답자 절반 이상이 의향 있다고 답해

기업이나 기관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원칙과 관련해 응답자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상반된 입장을 담은 진술문 2개씩을 짝지어 총 3쌍(6개)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4점 척도(1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4점: 매우 동의함)로 물었다. 진술문은 구체적으로 ▲데이터 활용 기준을 정할 때 이용자 의견 반영 필요성, ▲기업·기관이 데이터 활용 시 자율성의 범위, ▲피해 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한 조건에서 피해 발생 시 기업·기관의 책임 범위라는 세 가지 쟁점을 놓고, 이용자의 권한과 기업·기관의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과 기업·기관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짝지어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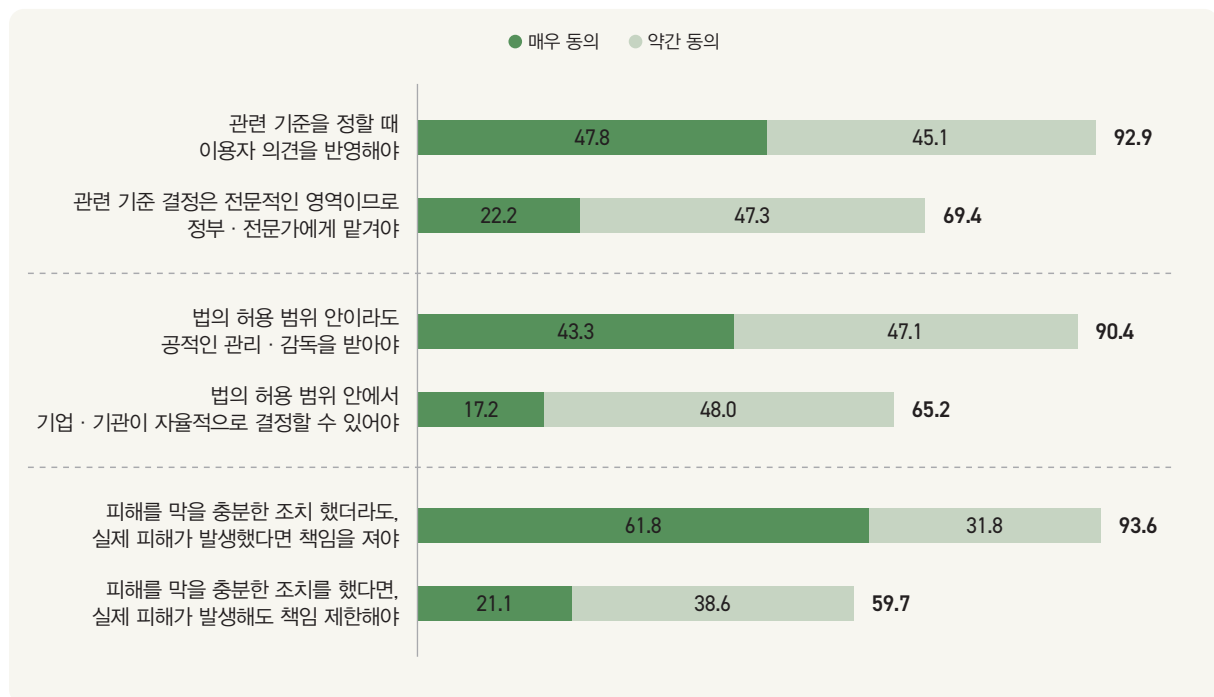
조사 결과, 세 쟁점 모두에서 이용자 권한과 기업·기관의 책임을 강조하는 쪽에 훨씬 많은 응답자가 동의했다. “이용자 데이터의 수집·활용에 관한 기준을 정할 때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데 동의(매우 동의 47.8%, 약간 동의 45.1%)한 응답자는 92.9%에 달했지만, “이용자 데이터의 수집·활용에 관한 기준 결정은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정부나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동의한 비율은 69.4%로 23.5%p 낮았다. “기업이나 기관의 이용자 데이터 활용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이라도 공적인 관리·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데도 90.4%가 동의해, “기업이나 기관은 이용자 데이터의 활용 방법을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65.2%)는 의견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책임 소재를 둘러싼 견해차는 세 쟁점 가운데 가장 크게 벌어졌다. “기업이나 기관이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피해를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했더라도,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는

93.6%의 응답자가 동의한 반면, “기업이나 기관이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피해를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했다면,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는 59.7%만 동의해, 두 응답 사이에 33.9%p 비율 차이가 확인됐다.

이처럼 응답자들은 데이터를 다루는 기준·감독·책임의 문제에서 이용자의 발언권과 기업·기관의 책임을 좀 더 무겁게 보는 경향을 드러냈다. 다만 상대적으로 낮다고는 해도 기업·기관의 자율성이나 정부·전문가 위임, 책임 제한에 동의하는 응답 역시 10명 중 6~7명꼴이라는 점은 함께 눈여겨볼 만하다.

그림 1 기업·기관의 이용자 개인정보·데이터 수집·활용 ‘원칙’에 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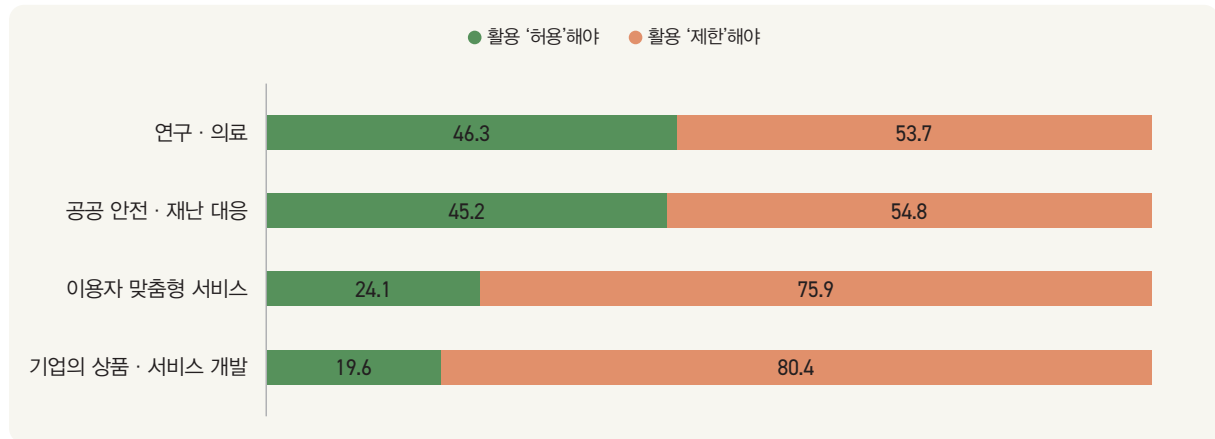
이어서 기업이나 기관이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하는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 권리 침해 위험을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다고 보는지 살펴보았다. 응답자들에게 ▲공공 안전·재난 대응 ▲연구·의료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기업의 상품·서비스 개발이라는 네 가지 목적 각각에 대해 상반된 의견(‘허용’ 대 ‘제한’)을 쌍으로 제시하고, 자신의 생각에 더 가까운 쪽 하나를 고르게 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연구·의료’ 목적에 대해서는 “질병의 예방·치료나 의학·과학 연구에 도움이 된다면, 개인정보 권리 침해 위험이 있더라도 데이터 활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질병의 예방·치료나 의학·과학 연구에 도움이 되더라도, 개인정보 권리 침해 위험이 있다면 데이터 활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었다. 나머지 세 목적에 대해서도 목적 부분만 바꾸고 같은 문장 구조로 물었다.

그 결과, 활용 목적에 따라 ‘허용’ 응답 비율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질병 예방·치료나 의학·과학 연구’를 위한 데이터 활용에는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46.3%)가 허용 쪽을 선택했고, ‘사회적 피해 예방이나 재난 대응’을 위한 활용 또한 이와 비슷한 수준(45.2%)을 나타냈다. 반면 ‘더 편리하고 개인에게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활용에는 허용 응답이 24.1%에 그쳤고,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목적에 대해서는 그 비율이 19.6%에 불과했다.

요컨대 응답자들은 공익적 목적의 데이터 활용에는 절반에 가까운 비율로 개인정보 권리 침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개인화 서비스나 상품 개발처럼 기업의 이익과 직결되는 목적에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

그림 2 기업·기관의 활용 목적별 개인정보·데이터 수집 및 활용 '허용' 대 '제한' 인식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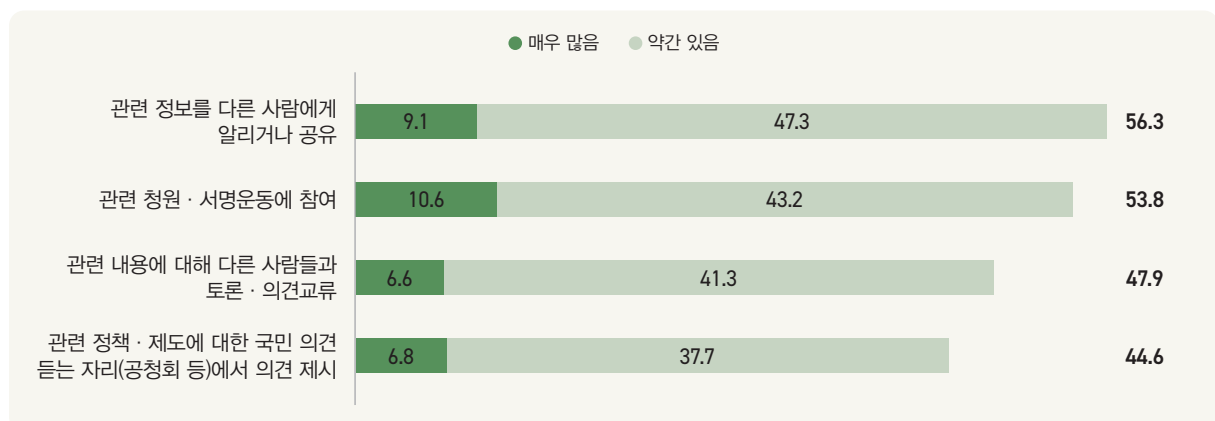


개인정보를 포함한 이용자 데이터 수집 · 활용과 관련된 사회적 의제나 현안에 대해 응답자들이 실제로 '참여할 의향'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알아봤다. 총 4개의 참여 방식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4점 척도(1점: 전혀 없음, 4점: 매우 많음)로 답하게 했다.

이용자 데이터 수집 및 활용과 관련된 사회적 의제 · 현안에 대한 참여 의향은 40% 중반에서 50% 중반 범위의 비율을 보이며 참여 방식에 따른 편차가 크지 않은 편이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참여 의향이 가장 높은 방식은 “관련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유하기”로, 응답자의 56.3%(매우 많음 9.1%, 약간 있음 47.3%)가 참여할 뜻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청원이나 서명운동에 참여하기”(53.8%)는 근소한 차이(2.5%p)로 그 뒤를 이었고, “관련 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거나 의견 나누기”(47.9%)는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비율을 보였다. 참여 의향이 가장 낮게 나타난 “정부 · 공공기관이 관련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고자 할 때(공청회 등) 의견 제시하기”(44.6%) 또한 그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림 3 이용자 개인정보·데이터 수집 및 활용 관련 사회적 의제·현안에 대한 '참여' 의향

(단위: %)



■ 개인정보 및 이용자 데이터 관련 교육 경험 및 필요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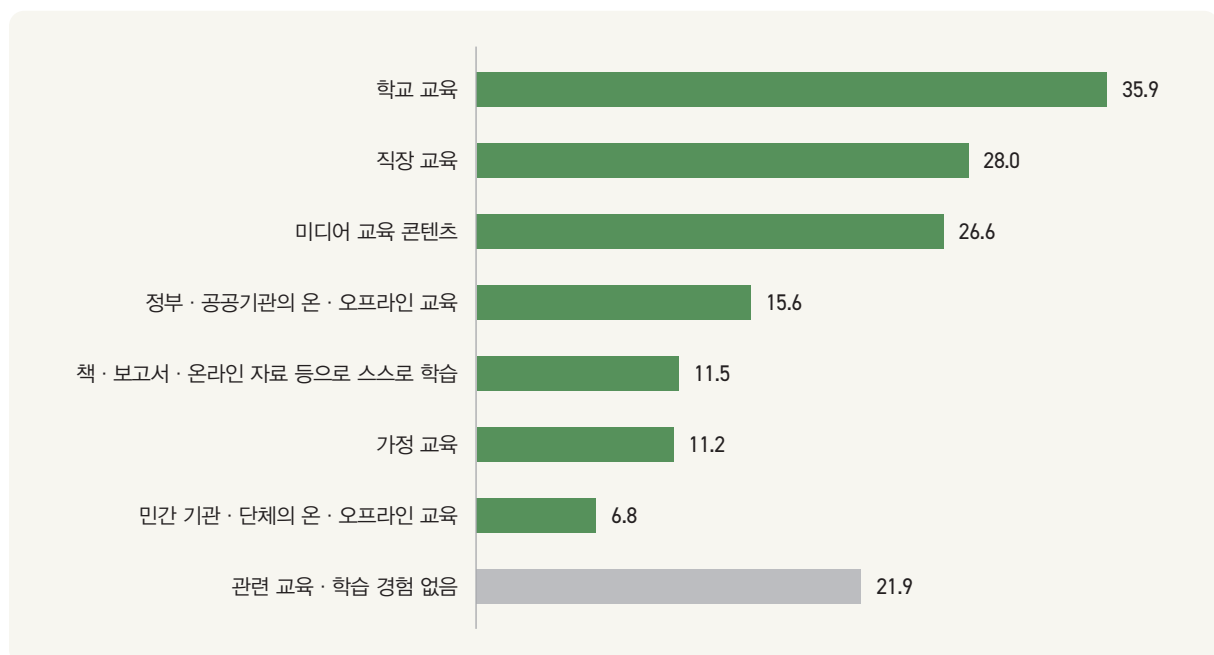
- ‘학교 교육’ 필요성 인식은 94%로 모든 교육 제공 경로 중 가장 높았지만, 정작 학교에서 관련 교육을 받아본 경험은 36%에 그쳐(58%p 격차)
- 관련 교육·학습 경험이 전혀 없는 응답자도 5명 중 1명 이상(22%)
- 관련 교육·학습 경험자의 78%는 “문제 이해·판단에 도움 됐다”고 평가
- 교육 필요성은 ‘나 자신’보다 ‘우리 사회’ 차원에서 전 항목 더 높게 나타나; 특히 ‘타인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방지’ 항목에서 격차 가장 커

설문조사 참여자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 이용자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이해와 판단 등에 관한 ‘교육’을 받거나 관련 내용을 ‘학습’해본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교 교육, 직장 교육 등을 포함해 총 7개의 보기를 제시하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게 했다.

조사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경험한 적 있다고 답한 경로는 ‘학교’로 35.9%였다. 그 뒤를 ‘직장’(28.0%)과 ‘미디어 교육 콘텐츠’(26.6%)가 20%대 중후반 비율로 이었고, 이하 ‘정부·공공기관의 온·오프라인 교육’(15.6%)부터는 경험 비율이 모두 10%대 이하였다. 가장 많이 꼽은 경로인 학교 교육조차도 3명 중 1명꼴에 그쳤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권리와 관련한 역량 교육·학습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시된 7개 경로 가운데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즉 관련 교육이나 학습 경험이 전혀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21.9%로 적지 않았다는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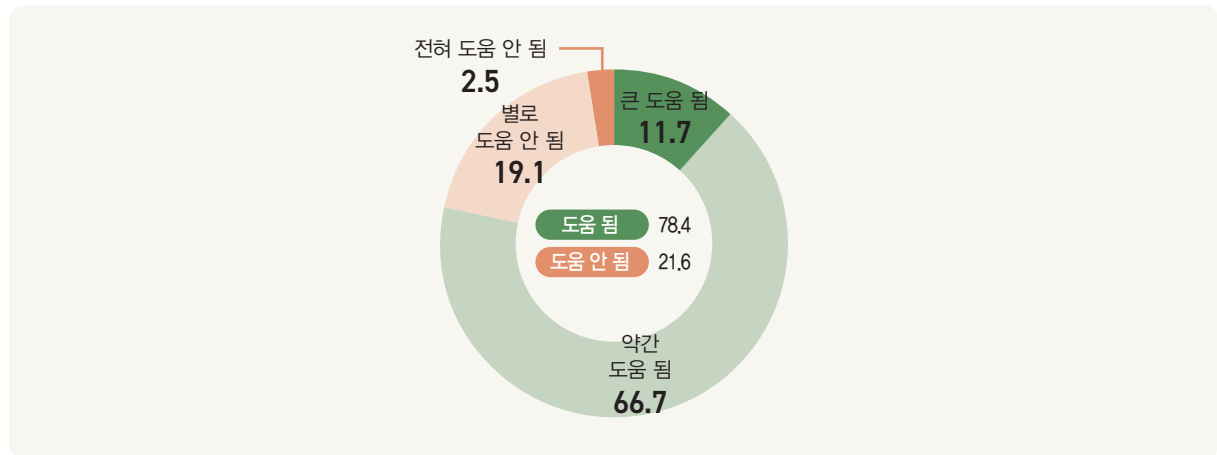
그림 4 개인정보 보호·권리, 이용자 데이터 활용 관련 이해·판단 등에 관한 ‘교육·학습 경험’(중복선택)

(단위: %)



앞선 문항에서 개인정보 권리 역량 관련 교육이나 학습 경험이 있다고 밝힌 1,405명에게는 해당 경험이 관련 문제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4점 척도(1점: 전혀 도움 안 됨, 4점: 큰 도움 됨)로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 3/4 이상인 78.4%가 도움됐다(큰 도움 됨 11.7%, 약간 도움 됨 66.7%)는 반응을 보였다. 바로 앞 결과와 함께 종합하면, 개인정보 권리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이나 학습의 기회 자체는 넓지 않지만, 실제로 교육·학습을 경험한 이들 사이에서는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 평가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 셈이다.

그림 5 이용자 개인정보·데이터 관련 교육·학습이 관련 문제 이해 및 판단에 “도움됐다”는 응답(1,405명 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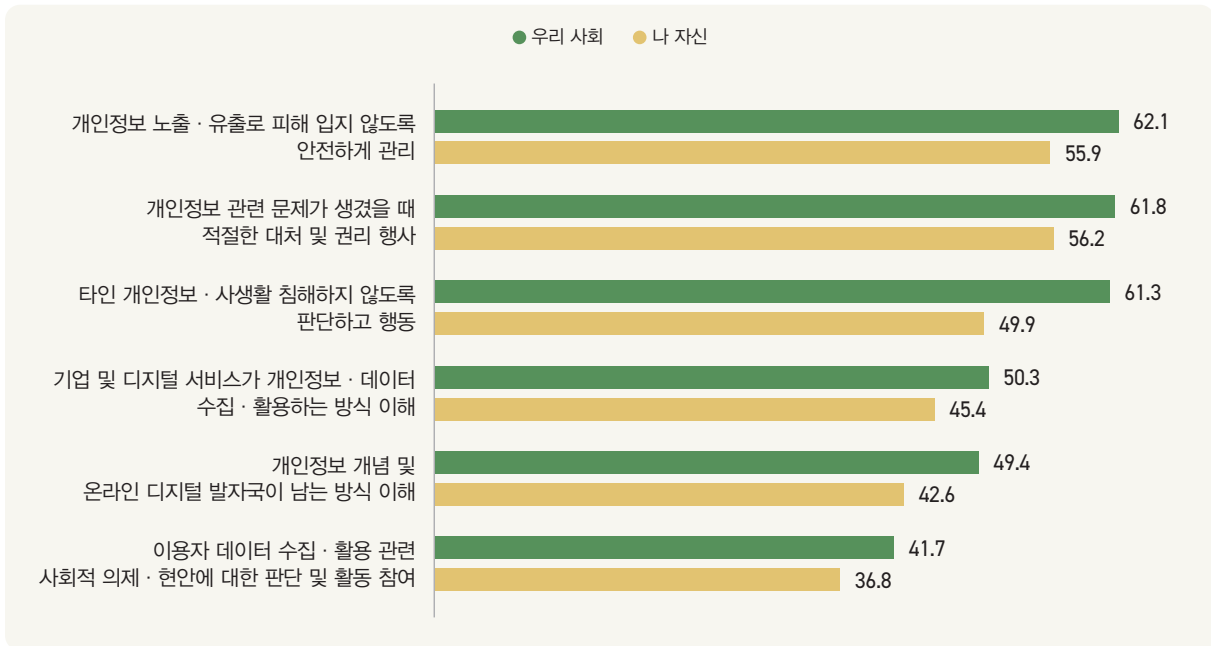
이어서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 이용자 데이터 관련 교육에서 어떤 내용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개인정보 개념 이해, 안전한 관리, 기업·디지털 서비스의 데이터 활용 방식 이해 등을 포함해 총 6개의 주제를 제시하고, 이 각각을 ‘교육’을 통해 다룰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우리 사회’와 ‘나 자신’ 차원으로 구분한 후 차례대로 4점 척도(1점: 전혀 필요 없음, 4점: 매우 필요함)로 물었다.

제시된 주제들에 대한 교육 필요성 인식은 ‘우리 사회’(89.8~94.3%)와 ‘나 자신’(83.8~92.3%) 모두 전반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항목 간, 그리고 주제 간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매우 필요함”(4점)에 해당하는 응답만 떼서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우리 사회’와 ‘나 자신’ 간 응답 차이가 좀 더 두드러졌다. 6개 항목 모두에 대해 ‘우리 사회’ 쪽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약간 필요함’까지 합친 “필요하다” 전체 비율에서도 동일한 경향이었으나(최소 1.1%p에서 최대 6.2%p 범위), “매우 필요함”만 추려서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진 것이다(4.9~11.4%p).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항목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리 사회 차원에서는 61.3%였던 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49.9%에 그쳐 11.4%p 차이가 확인됐다. 이는 같은 역량이라도 사회 구성원 전반에게 필요하다고 보는 정도와 스스로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 사이에 온도 차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일 것이다.

그림 6 이용자 개인정보·데이터 관련 교육 “매우 필요하다” 응답 비교: ‘우리 사회’ 대 ‘나 자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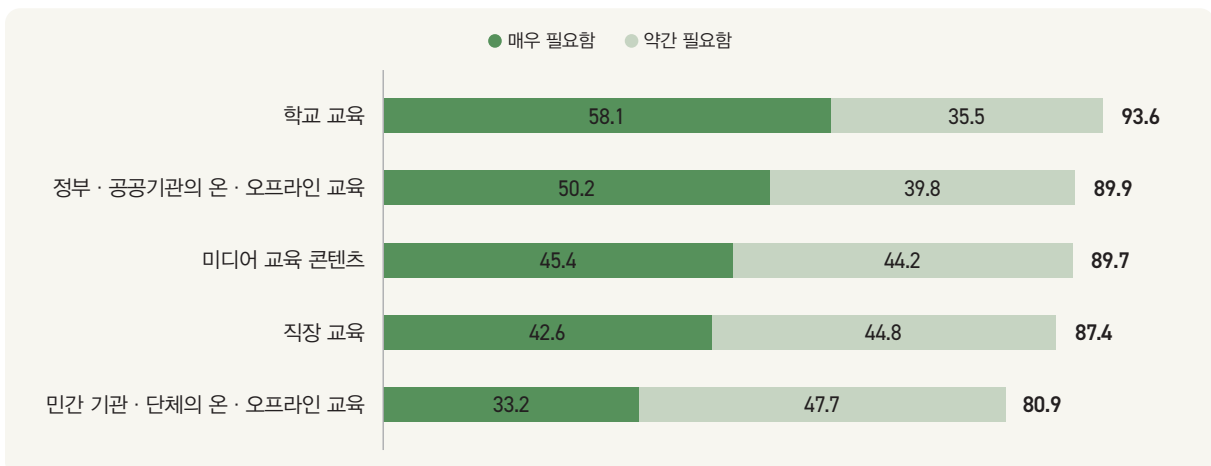


이 절에서 마지막으로 알아본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 이용자 데이터 활용에 관한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였다. 이를 위해, 앞서 관련 교육 · 학습 경험을 물을 때 제시했던 7개 경로 가운데 개인 차원(가정에서의 교육, 스스로 자료를 찾아 학습하는 방식)은 제외하고 제도적으로 확대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5개 경로만 남겨 보기로 제시한 후, 각각의 방식을 통한 교육 제공 필요성을 4점 척도(1점: 전혀 필요 없음, 4점: 매우 필요함)로 답하게 했다.

조사 결과, 5개 경로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 80%를 웃돌았다. 그중에서도 ‘학교 교육’의 필요성 인식이 93.6%(매우 필요함 58.1%, 약간 필요함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 비율은 앞서 살펴본 학교를 통한 교육 · 학습 경험 비율(35.9%)과 57.7%p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즉 응답자 10명 중 9명 이상이 학교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작 학교에서 관련 교육을 받아본 사람은 3명 중 1명 남짓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림 7 이용자 개인정보·데이터 관련 교육 ‘제공 경로’별 필요성 인식

(단위: %)



교육 방식별 “필요하다”는 응답에 큰 편차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매우 필요하다”(4점)로 답한 비율만 떼서 살펴보면, 순위에는 변동이 없는 대신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경향이 관찰됐다. 구체적으로, 2위 ‘정부·공공기관 교육’(89.9%)부터 4위 ‘직장 교육’(87.4%)까지는 필요성 인식은 80%대 후반의 엇비슷한 비율을 보인 반면, “매우 필요함” 응답은 50.2%에서 42.6%로 좀 더 큰 차이(7.6%p)를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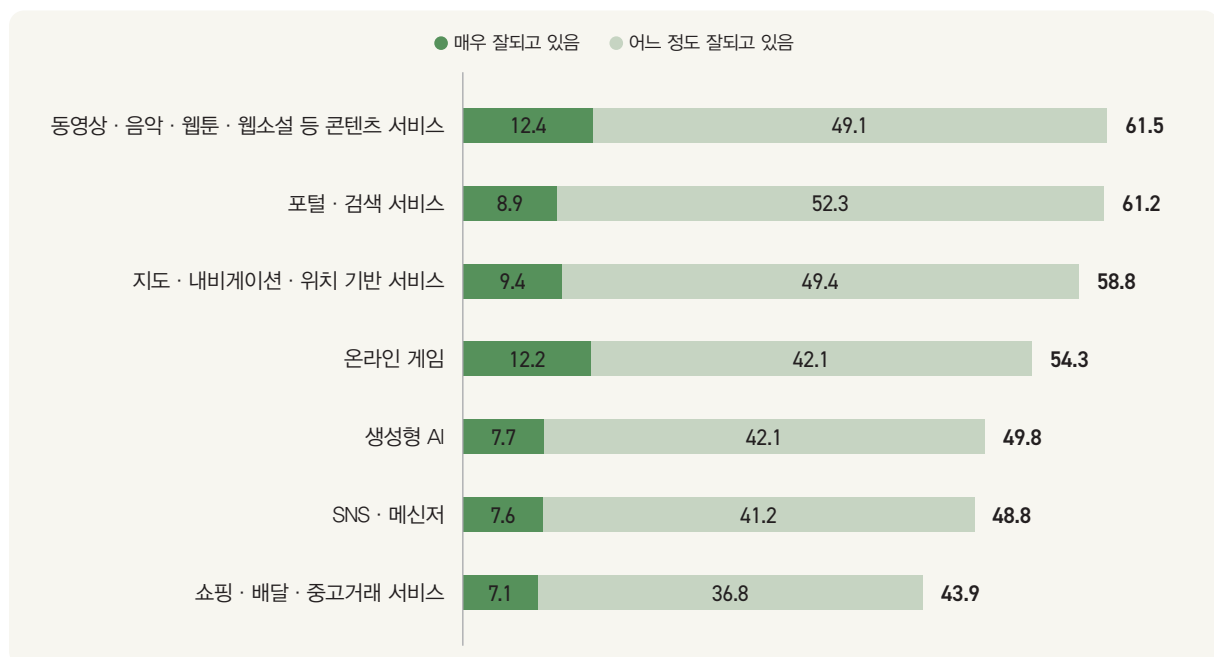
■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관리 및 권리 준수 수준 인식

- 디지털 서비스별로 개인정보가 “잘 관리되고 있다”는 인식: ▲콘텐츠 서비스(62%), ▲포털·검색 서비스(61%)에서 높았지만, ▲쇼핑·배달·중고거래 서비스(44%)는 가장 낮아, ▲“매우 잘되고 있다”는 응답은 모든 서비스에서 12.5%를 넘지 못해
- 개인정보 보호·관리 수준(10점 만점) ▲나 자신(7.1점) > ▲내 주변 사람들(6.3점) > ▲우리 사회 구성원들(5.5점)… 우리 사회 전반의 ‘제도·체계 수준’은 5.4점에 그쳐

이 절에서는 우리 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개인정보 보호·관리 및 권리 준수 수준을 응답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방식이 서로 뚜렷하게 다른 디지털 서비스 유형을 총 7가지로 구분해 제시하고, 각각의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잘 관리·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4점 척도(1점: 전혀 잘되고 있지 않음, 4점: 매우 잘되고 있음)로 조사했다.

그림 8 디지털 서비스 유형별 개인정보 관리·보호 “잘되고 있다”는 인식

(단위: %)



그 결과, 7개 유형 가운데 개인정보 관리·보호가 잘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디지털 서비스는 ‘동영상·음악·웹툰·웹소설 등 콘텐츠 서비스’로 61.5%의 비율을 보였다(매우 잘되고 있음 12.4%, 어느 정도 잘되고 있음 49.1%). 그 뒤를 근소한 차이로 ‘포털·검색 서비스’(61.2%)가 이었다. 이 두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개 유형은 40%대 초반에서 50%대 후반 사이에 분포했는데, ‘지도·내비게이션·위치 기반 서비스’(58.8%)와 ‘온라인 게임’(54.3%)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편이었고, 최근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는 ‘생성형 AI’(49.8%)와 일상적으로 쓰이는 ‘SNS·메신저’(48.8%)는 절반에 못 미쳤다. 가장 낮은 인식을 보인 유형은 ‘쇼핑·배달·중고거래 서비스’로 43.9%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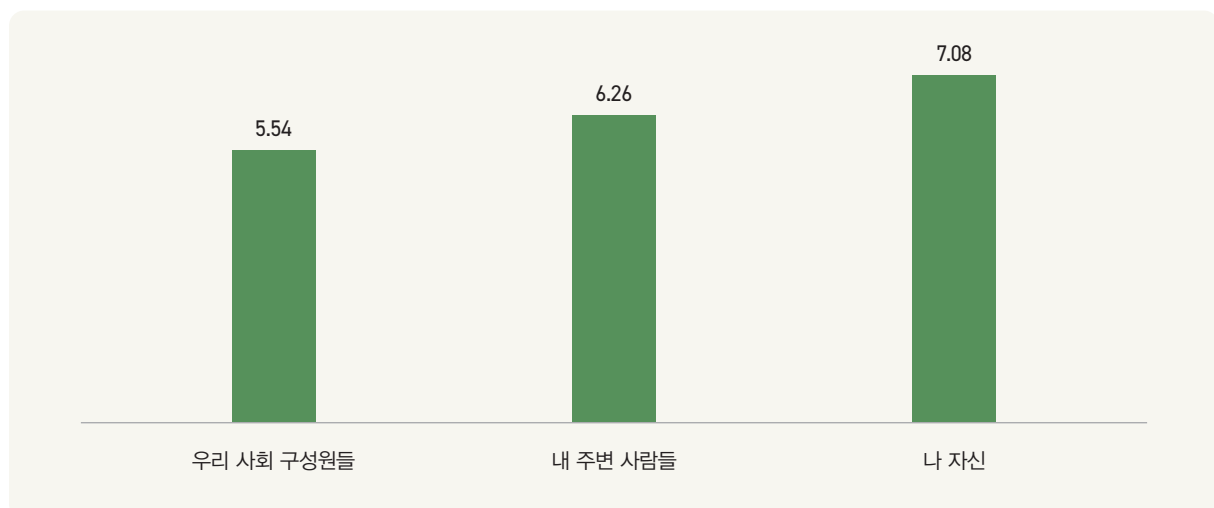
잘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절반을 넘어가거나 그 언저리인 항목이 대다수였으나, “매우 잘되고 있음” 응답만 별도로 떼서 살펴보면 그 비율이 최고 12.4%에 불과하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응답자 다수가 개인정보 관리·보호가 잘되고 있다고 답했더라도, 확신에 찬 평가보다는 유보적인 긍정에 가까움을 보여주는 결과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관리하고 관련 권리를 지키는 정도를 응답자 스스로 평가해 보도록 했다. 앞선 문항들과 달리 이번에는 4점 척도가 아니라 0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로 답하게 하는 방식을 취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점수를 매기기에 앞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 ‘가까운 주변 사람들(가족, 친구, 동료 등)’ 순서로 먼저 점수를 부여하게 했고, 그 후에 응답자 자신에 대해 평가하도록 요청했다. 조사 결과, 자신과 가까운 대상일수록 평가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평가는 평균 5.54점으로 가장 낮았고, ‘가까운 주변 사람들’은 6.26점, ‘나 자신’은 7.08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와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 보장, 이용자 데이터의 적절한 활용과 관련된 현재 우리 사회의 전반적 제도·체계 수준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게 한 결과, 평균 5.39점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개인정보 보호·관리 평가 점수(5.54점)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결국 응답자들은 평가 대상이 자신에게서 멀어질수록 개인정보 보호·관리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사회 구성원 전반에 대한 평가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체계에 대한 평가는 나란히 비슷한 수준으로 낮았다.

그림 9 개인정보 보호·관리 및 관련 권리 준수 수준 인식: ‘정보주체별’ 비교(10점 만점)

(단위: 점)



■ 맺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정보주체가 이용자 데이터의 수집·활용 원칙과 관련해서 이용자의 권한과 기업·기관의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에 압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실제 데이터 활용을 허용할 수 있는 정도는 그 목적에 따라 뚜렷하게 달리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개인정보·데이터 활용을 일률적으로 허용하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인식하기보다, 상업적 목적에 비해 공익적 목적의 활용에 더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등 그 목적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판단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 권리 역량과 관련한 교육의 필요성은 폭넓게 공감하면서도 실제 그런 교육이나 학습을 경험한 비율은 이에 한참 못 미쳤고, 특히 가장 필요성이 높다고 꼽힌 학교 교육에서조차 경험 정도와 필요성 인식 사이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우리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보다 눈에 띄게 낮았으며, 이를 뒷받침해야 할 우리 사회의 제도·체계 수준에 대한 평가도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미디어 이용자들이 정보주체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권리 역량 교육의 기회를 넓히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와 적절한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제도·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조사방법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에서는 디지털·AI 시대에 이용자 개인정보 및 데이터 수집·활용에 대한 정보주체로서의 인식, 개인정보 권리 역량 관련 교육 경험 및 필요성 인식 등을 알아보고자 10~50대 1,8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는 설문조사 전문업체 (주)엠브레인의 패널에서 성별, 연령대 및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할당해 모집했다. 조사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 51.4%, 여성 48.6%였으며, 연령대(만 나이 아닌, 출생 연도 기준 '우리 나이')별로는 10대(17~19세)부터 50대까지 각 20%씩이었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서울 18.9%, 인천·경기 34.5%, 충청권 10.8%, 경상권 22.7%, 전라권 9.0%, 강원·제주 4.0%였다. 미성년자를 제외한 성인 응답자 1,440명의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 15.5%, 대학 재학 및 졸업 74.2%, 대학원 재학 이상이 10.3% 비율이었다. 실사는 2026년 8월 27~31일에 이뤄졌다. 조사 안내 이메일은 20,451명에게 발송됐으며, 그중 2,156명이 조사 페이지에 접속했고, 성별·연령대·거주지역별 할당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중간에 자진 중단한 이들을 제외하고 응답을 완료한 사람은 1,933명이었다. 그 가운데서 데이터 클리닝 과정 등을 거쳐 총 1,800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3\%$ 포인트다.

※ 본 보고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6년 자체연구과제 <디지털·AI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권리 역량과 데이터 시민성 교육>의 일부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전체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연구서는 2026년 11월 30일 발간 예정입니다.

2026년
9호

KPF 미디어브리프

K P F M e d i a B r i e f W e b z i n e

발행인 김효재

편집인 임석규

기 획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발행일 2026년 9월 30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3층

전화 (02) 2001-7743 팩스 (02) 2001-7740

www.kpf.or.kr

편집 (주)나눔커뮤니케이션

0403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7길 16 교평빌딩 304호

전화 (02) 333-7136 팩스 (02) 333-7146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2026

〈KPF미디어브리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로 제작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